

情報社會와 行政**

房 錫 炫*

〈目 次〉

- | | |
|-------------------|------------------|
| I. 情報社會로의 進展 | IV. 地域情報化和 地方自治制 |
| II. 情報公開와 行政의 外部化 | V. 自律과 創造 |
| III. 情報分散을 통한 效率化 | |

〈요 약〉

현재 우리 社會는 産業社會의 단계를 넘어서 高度産業化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시에 情報社會로의 移行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問題狀況들이 社會全般的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情報社會로의 進전이라는 변화에 行政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 변화를 선도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行政改革의 方向을 行政의 外部化, 效率化, 自律化 등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情報社會에 있어서의 行政改革이 지향하는 작은 政府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組織·人力·財政規模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社會가 多元化되고 複雜化되면서 政府에 대한 行政서비스의 요구는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政府構造의 再組織化와 政府機能의 再編은 사회전반의 民主化 추세와 社會衡平이라는 차원에서 社會的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方向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情報化時代에 있어서의 行政改革은 情報獨占에 의한 行政萬能을 예방하면서 情報의 公開擴大와 情報民主主義의 實現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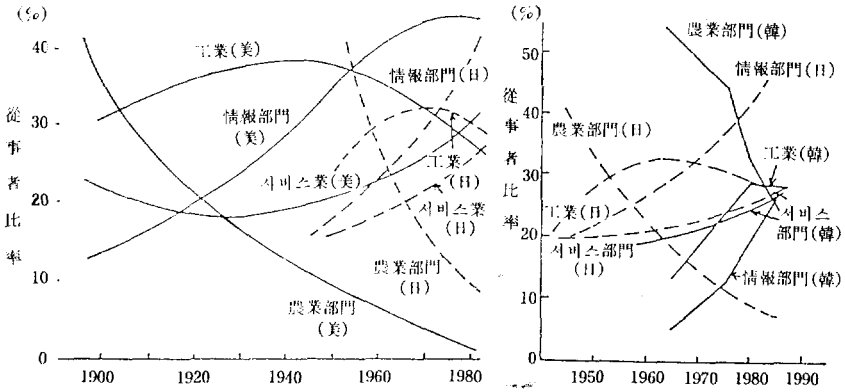
I. 情報社會로의 進展

오늘날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강력히 추진해온 産業化를 高度化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情報化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환경속에서 극심한 變化를 겪고 있다. 매우 짧은 기간안에 農業社會에서 産業社會로 탈바꿈하였으며, 밀려드는 情報

* 서울大 行政大學院 副教授

** 本 論文은 1988, 6月 通信開發研究院 주최로 열린 「情報化社會와 民主發展」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그림-1〉 韓國・日本・美國에서의 雇傭構造變化 推移¹⁾

化의 결과로 커다란 變革期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變化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雇傭構造의 變化라고 하겠다(그림-1 참조). 우리의 경우 美國・日本과 같이 雇傭構造의 變化類型은 비슷하나 문제는 그 週期가 짧다는 데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產業社會로의 발전에서 파생된 제반 社會問題들과 情報部門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情報社會의 모순을 동시에 겪고 있다.

과거에는 高度經濟成長이라는 하나의 政策目標로 일원화될 수 있었지만, 현재의 狀況은 하나의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다른 실타래가 얽혀버리는 매우 複雜한 局面이다. 즉, 高度產業社會를 指向함으로써 農村問題, 都市問題, 資源問題, 環境問題, 人口問題 등이 노출되고 있으며 情報社會로의 이행에서 오는 諸般問題들이 함께 重疊・混在되어 있는 狀況이다.

이러한 混在된 社會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富와 情報의 不均衡²⁾, 즉 富와 情報의 兩極化現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產業社會에서의 富의 存在뿐만 아니라 情報社會로의 移行段階에서 나타나는 情報의 不均衡도

1) 〇 그림은 姜受錫, 「情報化에 따른 產業分類方式과 雇傭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 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p.52에서 발췌한 것임. 고용구조를 1.2.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情報社會 진전에 따른 影響를 반영하기 위해 農業部門, 工業部門, 서비스業部門, 情報部門의 4부문으로 구분한 OECD 분류방식이 낫다 의미있다. OECD, ICCP6, Information Activiti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Vol. I, (Paris) 1981, pp.21-70.

2) 情報량이 產業量과 重복되어 二重構造를 형성하여 先進國과 開發途上國간에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한다. 같은 논리가 한 國家內에서 소득간, 지역간 격차에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李奉珍 譯, 情報化社會, 增田朱二 原著(서울: 電設文化社, 1982), pp. 1: 4-136.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産業化는 都市集中現象을 加速化시켰고, 情報化는 이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情報가 서울에 集中되는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는 富의 集中現象과 함께 他地域으로부터의 人口流入에 의하여 首都圈의 肥大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地域開發과 發展은 「地域情報化」를 公共政策次元에서 시행하여 서울에 집중된 情報를 地方에 分散내지는 共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情報化는 組織・社會 혹은 國家를 集權化시킬 수도 있으며, 分權化도 가능하게 한다.³⁾ 따라서 어느 方向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 점에서 民主化는 意味를 갖는다. 情報技術은 情報民主化에 의한 分權化를 추진하는 道具가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強力한 管理統制國家에로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兩날을 가진 情報社會는 국가 전반의 創造的 분위기속에서 국민간의 合意를 바탕으로 形成해나가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物質的 基盤을 구축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成長의 果實을 고르게 分配하는 문제도 成長에 못지 않게 社會이 士化되고 있다. 情報化의 추진은 能率性과 民主性, 進歩와 衡平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수단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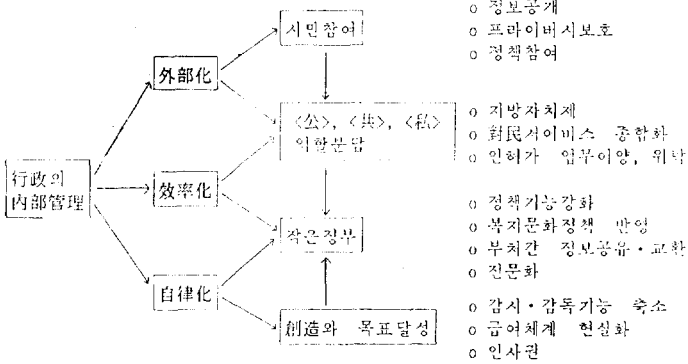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속에서도 「작지만 고도의 능률성을 가진 政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확보 유지해 나가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情報化作業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情報化를 추진해나감에 있어서 情報의 公開, 國民에 의한 行政의 監視 監聽體制의 強化, 및 行政過程에 대한 市民參與의 擴大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情報民主主義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政府에 의한 情報化作業의 추진이 「情報民主主義」라는 大原則에 철저히 입각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物理的, 公權力的 統制보다도 더욱 강력한 統制力을 행사하는 「管理國家」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情報에 대한 接近可能性을 봉쇄하는 것은 公權力에 의한 物理的 힘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다. 民主社會에 대한 우리의 바램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情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情報의 擴散이야말로 情報社會를 구축하려는 戰略的 目標의 일부이기도 하다.

3) M.J. Rile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nd ed.* (San Francisco: Holden-Day, 1981), p.95.

4) 貝沼洵, *LECTURE 「ME의 時代」 行政의 레크チャー* (東京: 中央法規出版株式會社 1986), p.299.

行政改革方向



<그림 2>

다극화되어가는 사회현실을 의면한 채 우리의 行政이 지금까지와 같은 폐쇄된 체계를 고집하면서 情報體系的 能率化·效率化만을 앞세워 나간다면 行政權力의 肥大化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行政이 情報를 獨占·私用化함으로써 情報를 獨占에 따른 市民의 政治參與가 제한되고, 거대한 管理統制國家化的 가능성이 배태된다고 할 수 있다.

II. 情報公開와 行政의 外部化

情報化가 진전되면서 社會는 多元化되고 分極化되어 간다. 이러한 社會現象을 의면하고 行政이 지금까지의 秘密主義를 견지하여 自己閉鎖의 領域을 고집한다면 高度의 管理國家化할 可能性은 상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情報의 公開를 통한 行政의 「外部化」가 금후의 行政改革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社會全般的인 改革意志의 확산과 더불어 政府次元에서도 組織改編, 行政體質改善 등 行政改革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改革의 方向과 性格을 좌우할 基本的인 要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現政權이 信賴性和 正當性を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政策手段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아울러 急變하는 國內外 環境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선택되는 政策內容이 대다수 國民들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信賴할 수 있는 政府」, 「正當性있는 政府」가 전제되어야 한다. 政府가 國民에

가 信賴받지 못하는 根本的 理由는 情報의 獨占과 私用化에 따른 閉鎖性에 있다. 行政情報가 國民에게 公開되고 그로 인해 國民이 行政內部를 파악하고 行政過程에 參與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 國民의 政府에 대한 信賴度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行政의 內部管理를 위한 情報의 獨占, 非公開가 行政能率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一般國民을 소외시키고 그로 인해 政府에 대한 不信이 높아지는 것은 民主化 推進에 커다란 逆效果를 가져오며 能率 自體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情報公開를 아예 制度的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情報公開制度는 이미 歐美 11個國에서 채택하여 운영중이며, 日本에서도 法律化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地方自治團體 水準에서 條例化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따라서 韓國에서도 최근 情報에 관한 基本的 權利로서 논의되는 「알 權利」, 「情報使用權」, 「情報參加權」 등을 충족시키고 또한 政府의 信賴性을 회복시키기 위해 情報公開는 하루 빨리 制度的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策이나 企劃에 관한 情報는 利害當事자들에게는 물론 一般國民들에게까지 公開되어 가능한 한 많은 國民의 參與를 유도함으로써 政策에 대한 支持基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령 政策決定機構나 行政管理組織 그 自體의 內部管理를 위한 情報라 할지라도 不必要한 疑惑을 사전에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도 굳이 숨겨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大規模의 事業을 利用者負擔으로 하는 公共機關의 運營方式이 非公開되고 그로 인해 國民의 疑惑을 사고 있는 분야(예를 들어, KBS와 TV시청료, 韓國電力公社와 전기요금 등)에서도 운영에 관한 一般的 情報는 완전히 公開되어야 한다.

한편 行政情報의 公開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個人的 프라이버시 보호와 情報 衡平의 문제이다. 行政上 필요한 內部管理情報 중에는 個人的 身上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부분적인 公開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第三者에게 무차별적으로 公開되는 것은 原則적으로 금해야 하고, 따라서 만일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制度的인 裝置마련이 요청된다. 또 앞으로 所得隔差보다도 더 심각하게 대두될 可能性이 있는 地域間, 階層間 情報隔差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情報에 대한 接近機會를 均등하게 보장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더우기 行政機關으로부터의 情報의 選別的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各地或團體와 個人別로 情報의 形成과 管理·運營體制를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政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Ⅲ. 情報分散을 통한 效率化

질문적으로 行政改革論者들의 주장을 보면 官僚制的 構造를 지닌 行政府가 안고 있는 문제로 決定權限의 集中, 人事沈滯로 인한 士氣低下, 創意性 缺如, 官僚的 派閥意識에 따른 調整의 곤란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解決方向이 매우 달라진다. 종래의 고식적인 처방에서는 權限集中에 대해 權限委任과 分散을, 士氣低下·創意性 缺如에 대해 여러가지 誘因制度(Incentive System) 開發과 教育訓練을, 派閥意識에 대해 教育과 人事制度의 改善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組織內的의 모든 情報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상의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情報는 組織의 혈관을 흐르는 血液과 같다. 組織의 동맥경화현상은 情報의 흐름을 저지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行政에 있어서 情報의 分散과 調整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管理해 나가느냐에 대한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情報論的 視角에서의 行政改革의 方法論이며 그 內容이 된다.

일가의 機關에 있어서 情報의 分散이란 權限의 委任과 分權化의 手段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情報의 分散이 반드시 組織의 分權化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상당히 官僚化된 政府組織에서도 個個의 政府機關內에서는 情報分散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다만 業務의 垂直的分化에 의해 政策의 決定을 담당하는 高位公務員과 政策의 執行 및 政策決定의 補佐業務를 담당하는 下位公務員들이 각각 요구하는 情報베이스가 다름에 따라 이들 모두가 같은 베이스의 情報를 共有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高位公務員일수록 組織外的 情報를 많이 보유하고 下位職일수록 組織內的 情報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情報의 分散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中央政府 組織間,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의 경우이다.

中央政府에서 部處間의 情報分散은 共同利用이 가능한 情報를 共有하고 交換하는 體制의 定立을 의미하며, 對等的 水平的 關係에 있는 組織間의 分散이므로 情報를 통한 行政機能의 調整과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우리나라의 行政電算化 基本計劃에 의하면 部處間 活用도가 높은 行政情報는 統合管理하여 여러 機關이 共同利用할 수 있도록 行政情報 共同活用體制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行政電算網 推進計劃과 基本計劃에 따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는 行政電算網이 구성됨에 따라 共同活用體制가 이에 꼭 입되도록 되어 있어서 行政情報의 共同利用이 가능한 基盤이 마련되고 있다.

政府部處간의 情報利用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情報를 통한 「調整機能의 強化」이다.

가령 政治에 관한 情報과 經濟에 관한 情報를 결합하고 通商·産業에 관한 情報와 技術에 관한 情報를 결합함으로써 밀접한 情報間에 有機的 結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企劃情報과 一般管理情報를 분리하여 權力集中을 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情報의 分散과 調整을 效率化하는 과정에서 組織構造의 變化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豫見되는 점이다. 이러한 變化들은 長期的 眼目에서 情報의 調整機能에 따라 政府組織을 改編해야 한다는 점을 暗示하는 것이며 이러한 方向에서의 組織改編이 아울러 政府의 效率化를 위해 필요한 作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政府에 의해 蒐集·分析되어 정리된 行政情報의 共用化가 가능해지면 對策서비스를 綜合化하여 서비스의 改善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중인 行政電算網構成에 對民서비스의 效率化를 위한 것이 다수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다.

情報가 政府組織의 中心에 위치하여 政府機能의 效率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래 行政의 內部管理를 위한 能率化와는 性格이 다르다. 우선 政府機能이 政策機能 위주로 變化할 수 있고 部處간의 情報共有·交換에 의해 內部管理 이상의 效率化를 기대할 수 있으며 國家競爭力의 提高에 絶對的 役割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行政의 外部化와도 共存할 수 있어 效率化와 民主化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情報利用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地方自治問題 역시 그 核心的 要件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Ⅳ. 地域情報化와 地方自治制

地方自治制度는 自治團體가 當該 團體에 관한 완전한 情報統制力을 가지고 中央政府와 對等한 關係에서 협의하고 교섭할 수 있을 때 완전한 것이 된다. 따라서 地方自治制 實施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行政改革의 方向도 地域情報化를 통한 情報의 地域的 分散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地域情報化는 國土政策的 觀點과 地域政策的 觀點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國

土政策的 觀點에서의 情報化의 추진은 國土全體의 균형있는 발전을 피하고 地域隔絶을 시정하며 情報分散型 社會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中央政府는 獨占에 가까운 情報를 自治團體와 共用化하고 情報를 이전시켜 分散化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全體 國土計劃을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自治團體에 필요한 情報를 체계적으로 分析 整理하여 이전에 주어야 한다.

또한 地域間의 隔差는 단순히 財政의 差, 大都市에의 거리적 원근의 差가 아닌 情報에 의한 隔差, 즉 情報에 대한 接近機能의 差異, 情報基盤의 差, 情報의 一部偏在에 의한 差 등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게 된다. 따라서 國土政策의 觀點에서 이러한 情報隔差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地域間에 情報衡平을 기하고 地方自治團體間에 相互地域情報를 共用化하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地域情報化가 단순히 하나의 地域的 次元이 아니라 自治團體間의 公共的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地域間의 情報衡平은 종래 地方自治의 關鍵으로 인식되어 온 地方財政의 확보와 함께 資源의 配分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地域政策的 觀點에서 地域情報化는 地域情報의 基盤을 정비하여 地域 스스로 地域的 問題에 대응하고 地域經濟 活性化나 住民生活의 便益向上 등을 도모하는 體制를 自治團體 입장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制가 效率의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地域情報의 선정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自治團體가 主體가 되는 것이 自治權 保障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地域情報의 선정을 自治團體에 委任함으로써 地域의 特性에 알맞는 情報, 地域住民의 利害關係에 일치하는 情報가 선정되어 수집·분석에 의해 地域住民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갖출 수가 있다. 中央政府에 의한 획일적인 地域情報의 규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國家 全盤的으로도 民主的 行政과 對應性을 갖춘 行政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은 內陸都市와 港口都市라는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同一한 組織構造下에 획일적 地域情報를 선정, 관리하고 있는 것은 地方自治制度의 실시와 더불어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地域政策的 觀點에서의 地域情報化는 自治團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地域情報의 基盤을 정비하고 情報를 선정·수집하여 관리하는데 이르기까지 필요한 人的 物的 資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自治團體가 中央政府와 對等한 地位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地域情報化는 國土政策的 觀點과 地域政策的 觀點에서 地域發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地方財政의 自立과 함께 地方自治制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自治團體 自體의 情報化도 중요하다. 地方自治團體 自體의 情報化하는 것은 中央政府의 情報化와 마찬가지로 下級機關間의 情報分散과 調整에 기초하여야 한다.

V. 自律과 創造

自由競爭을 기본으로 하는 市場機構의 原理에 따른 競爭體制의 運用을 위해 民間部門에 대한 政府의 干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認·許可業務등의 壟斷的 政府機能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政府의 업무 중에서도 事業의 性格을 가지는 것은 점차 民間에 移讓 委託되어야 하며 自律的 經營을 위해서는 經營權 移轉, 監視·監督의 縮小라는 意識적인 것보다는 情報의 移轉, 情報蒐集能力의 賦與라는 實質的 移讓이 필요하다.

이는 公私間의 自律的인 役割分擔을 의미하며 政策의 形成 및 提示機能은 政府에서 擔當하고 具體的 政策執行의 機能은 民間에서 擔當하는 體制로 정착됨을 뜻한다. 따라서 政府의 政策機能이 보다 강화되고 專門化되어 民間部門에서 生成되는 政策情報를 수집, 분석하여 政策에 반영하는 노력과 政策過程에 民間部門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提高되어야 한다. 政府機能이 이러한 性格을 가지게 되면 政策의 성격은 誘導的인 것이 되어 政策에의 順응이 강요되는 면이 줄어들고 自發的인 政策執行이 가능해진다.

수집·정리된 政策情報는 政策形成을 위한 情報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民間部門에 서비스될 때 高度의 活用을 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政府가 各企業이 活用할 수 있는 情報를 組織化한 附加價值情報網(VAN)을 형성하여 서비스하면 社會全體的인 生産性의 向上 및 資源配分의 效率化는 個別企業에서 苛하는 努力의 總體 이상일 수가 있다.

民間部門의 自律性 確保와 아울러 自律性을 진제로 한 創造的 精神의 擴散이 필요하다. 오늘날 經濟分野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벤처기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느 나라든 모험성과 創意性을 지닌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의 發露에 의해 經濟發展, 雇傭增大을 苛하고 있는 것이다.

自律性的 確保와 創造的 精神은 公과 私의 役割分擔에서뿐만 아니라 政府內

의 構成員에게도 요구된다.

行政改革이 단순한 制度改革뿐 아니라 對象集團의 積極적 參與와 政治的 리더십의 支持가 進程되어야 하기 때문에 行政改革이 情報社會의 進展過程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公務員의 意識, 價値觀도 情報社會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變化해 가야 한다.

情報社會에서는 社會變化의 속도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빠르므로 그에 대한 적응을 위해 個人의 創意性이 증시된다. 社會變化가 급속해짐에 따라 政府內에서도 硬直性和 官僚性의 타파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創意的 思考와 行動이 증시되게 된다.

行政公務員의 創造性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組織內의 문제로는 監視・監督機能의 強化, 給與體制가 非現實的인 데서 오는 士氣低下, 人事權의 不當한 行使에서 오는 身分의 不安定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監視・監督機能의 경우 公務員의 人的 情報가 기록되는 범위가 넓을 때는 公務員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創造的인 環境造成에 큰 애로를 낳게 된다.

公務員에 대한 監視・監督의 대폭적인 축소로 自律性을 부여함은 물론 創造的인 行政環境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行政改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